

[보도자료]

			
배포일	2026. 5.13(수)	문의	안보전략연구실(02-6191-1013)

핵추진잠수함 도입, '특별법 제정'으로 입법 가속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핵잠 추진 민관합동 지원단' 제2차 세미나 개최
"핵잠 특별법 제정 필요성 공감대...군 전용 안전규제·성실수행 면책·주민 수용성 등 핵심 쟁점 도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원장 김성배)은 5월 13일 오후,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2차 핵잠 도입 민관 합동 지원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핵잠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쟁점 식별 및 해결 방안」을 주제로, 지난 2월 출범한 '핵잠 추진 민관합동 지원단'의 후속 논의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1차 포럼에서 제시된 핵잠·핵연료·원자로(SMR) 3대 핵심축 로드맵을 실효성 있게 구현하기 위한 특별법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한미 공동 팩트시트 이후 강화된 정책적 모멘텀을 구체적 입법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세미나에서는 박노벽 前 주러시아 대사,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발표자로 나서 (가칭)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의 방향성과 그 안에 담겨야 할 핵심 내용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또한 LIG넥스원,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방산·조선 업계 관계자들도 패널로 참여하여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였다.

주요 논의 결과, ▲군 전용 안전규제기관 신설 ▲고난도 기술 개발의 시행착오를 보호하기 위한 '성실수행 면책제도' 명문화 ▲보안 인프라 비용의 국가 지원 ▲'국가전략기술인력' 지위 부여 ▲주민 수용방안 등이 특별법에 반영되어야 할 핵심 입법 과제로 도출되었다.

아울러 국제협력 측면에서는 저농축우라늄(LEU) 사용 원칙 명시를 통한 비확산 의지 천명과 AUKUS·IAEA 안전조치 협의 체계 구축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으로는 지역발전기금 법정화, 진해 군항 등 기존 군사보호구역 활용, 부유식 도크 (Floating Dock) 도입 등 민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입지 전략과 함께 신고리 5·6호기 사례를 참조한 주민공론화위원회 운영 방안이 제시되었다.

향후 지원단은 이번 세미나에서 도출된 입법 의제를 정리하여 정부 부처 및 국회 관련 위원회에 정책 자료로 제공하는 한편, 분기별 워킹그룹을 통해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정부에 건의하는 실무형 소통 창구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배 원장은 "핵심 도입은 단순한 무기체계 획득이 아니라 외교·안전·산업·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국가종합전략 과제"라며, "오늘 논의된 특별법 제정 방향과 제도적 해법들이 정부 정책과 국회 입법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지원단이 민관의 지혜를 결집해 끝까지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